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4/ 27 통권 1568호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차기 정부의 과제

2022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제외 범위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은 법인등기부상
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함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1세대 1주택 비
과세)
- 2022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고용중대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
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됨 (p.12)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 戰略

〈증여세는 증여자,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 단일 과세〉

개념, 구분	증여세 신고단위	상속세 신고단위
과세가액 합산	증여일부터 만 10년 이내 동일인(배우자 포함) 증여재산의 부부 합계(법 제47조 제2항)	사망시의 상속재산 + 10년 이내 상속인(자녀) 증여재산 + 5년 이내 비상속인(손자 등) 증여재산(법 제13조 제1항)
합산단위 판정	① 부모(배우자 합계) 따로, 조부모 따로, 외가 조부모 따로 신고 ② 수증자도 자녀별 따로, 손자녀 따로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자녀와 배우자)의 숫자나 실제 상속배분여부 관계없이 모두 합산
공제적용금액	배우자: 10년 단위 6억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등 합) 10년 단위 5천(미성년자 2천)	① 기초일괄공제 5억(자녀 등) ② 배우자 공제: 최소 5억≤배우자 실 상속액≤30억원
실제 신고 예시	① 조부모가 손자에 12억 증여 12억 - 2천 공제 = 1억 × 10% × 1.3배 = 1,300만원 증여세 ② 부모가 자녀 세금 1,300만원 납부 증여세는 1,300만원 × 10% = 130만원 자녀의 증여세 신고서는 ①과 ②를 합산하지 않고 ①과 ②는 별도임 ③ 자녀가 2인이면 각자 신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15억원 ① 사망 7년내 자녀에 5억 증여 ② 사망 7년내 손자녀에 3억 증여 상속과세액 = 15억 + 5억 = 20억원임 ①은 10년내 합산, ②는 5년 전의 7년전 손자증여재산이므로 합산 안함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68호 / 주간 17호

2022. 4. 27. (수)

· 발 행 인 : 이 윤 연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증여세는 증여자, 수증자별 각각 따로 신고,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 단 일과세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제외 범위	2
C E O 에 세 이	차기 정부의 과제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계산서 발행 대상 문의 - 당사 홈페이지 개발 업무를 개인 프리랜서에게 의뢰하고 지급하는 비용 은 기타소득 처리 문의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 관련 -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문의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함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개인·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 기업이 원하는 새정부 산업기술혁신정책 실행과제	9 10
직 장 인 Survival	경력을 키우는 7가지 방법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 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 여는 손급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법령법안-5117, 2021.09.17)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안-4611, 2021.08.13)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납기연장 추진	14
마케팅 Tax consulting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 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됨	12
세 무 정 보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1세대 1주택 비과세) - 2022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15 28
노 무 정 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48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4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 증여세 과세제외 범위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개념, 과세		과세제외금액, 계산방법, 이유
상속 · 증여재산		종교, 자선, 학술 등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법인주식금액
동일법인 주식 출연시 과세제외 범위 판단	주식범위	당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법인 주식 +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주식 + 다른 공익법인의 특정법인이준주식 보유분
	5%한도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② 동일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일반 공익법인 : 5% 초과부분은 상속 · 증여과세
	5%-10%	① 5% 초과주식으로 운용소득의 일정비율(80%) 이상 공익목적 사용 ②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1% 이상 공익사용 ③ 이사의 구성요건 충족(특수관계자 20% 이내 등)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5% 초과해도 과세 제외함
	10% 한도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20% 한도	의결권 행사하지 않을 것 + 자선 · 장학 · 사회복지 목적
동일법인의 다른 주주 등		동일법인의 특정주주집단이 5% 또는 10%를 출연한 상태이면, 다른 주주집단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도 상속 · 증여세 과세함
다른 주주의 다른 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이상 사용조건)		동일법인의 갑 가족 등 특수관계자의 갑 공익법인 5% 출연 + 을 가족특수관계자의 을 공익법인 5% 출연가능(소득의 80% 사용 조건으로 상속 · 증여세 없음)

차기 정부의 과제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드디어 3월10일, 치열하게 경쟁하던 대선투표가 끝났다. 양당후보의 표차는 24만7,077표, 0.7%였다. 대단히 근소한 표차로 사실상 ‘비긴게임’으로 정치적 출발점은 이제 같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에서 50.5%를 득표, 이재명후보(45.8%)를 4.7%, 31만표차로 승리했다는 점이다. 이는 부동산정책 무능으로 5년간 서울집값2배 폭등에 따른 문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세상이 다 아는 비문(非文)인 이 후보와 송영길 전 당대표가 뒤집어쓰긴 억울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1987년 쿠데타정권 전두환정부 말기 졸속개헌에 따라 대통령직선제 실시 이후 13대 대선 노태우후보때부터 19대 문재인후보에 이르는 7회 대선을 거치면서 16대 노무현대통령말기 17대 대선 이명박후보와 정동영후보 때를 제외하곤 모두 전두환, 노태우계열 정당후보가 민주당 계열후보에게 서울에서는 패배했다.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이번 대선 서울민심의 표출은 문정부에 대한 철저한 혐오라 할 수 있다.

이제 새로이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게는 어려운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우선 통계청의 2월말 발표에 의하면 출산율은 해마다 줄어 2020년, 27만명선에서 2021년, 26만명으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OECD주요국 중 최하 2021년, 0.81명으로 미래가 지극히 걱정된다.

저출산은 핵심노동인구, 국방인력, 교육시스템 등에 거대한 늪으로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문제에 가장 강도높은 대책을 강구한 나라가 프랑스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출산증가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강력한 가족정책을 추진했다. 한국도 지난 16년간 380조원을 썼지만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이것 갖고는 간에 기별이 가지도 않는다는게 프랑스의 역설이다. 그들은 매년 1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첫째, 가족수당제도. 둘째, 신생아 환영수당. 셋째, 육아휴직. 넷째, 출산휴가. 그래서 프랑스는

합계출산율 1.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육아에 따른 돈만 지급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절대적인 예산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모두 대선공약에 따른 예산구조조정은 공수표가 됐다. 문정부는 출발초기 국가부채가 2017년 660조2,000억원을 415조5,000억 증대시켜 1,075조 7,000억원이 됐다.

주상복합아파트와 함께 택아소와 국공립유치원 그리고 병약한 노인을 맡길 수 있는 탁노소가 함께하는 주탁복합아파트가 나올 차례다.(필자의 칼럼 ‘주탁복합아파트가 나와야’를 참조)

한교(韓僑)는 720만명, 한국인구 5,000만명의 14.4%, 한반도 총인구 7,200만의 10%가 되는 세계최대해외동포국가다.

한국의 고등교육받은 젊은이들 약50만명을 해외동포, 한상(韓商)에 공급하여 유대를 심화시켰으면 좋겠다.(2014년 10월 ‘한교네트워크를 구축하라’참조)

러시아 푸틴대통령이 뒤흔든 공급망 해결은 우리만의 핵심기술 틀어쥐고 경제회생에 성공해야 한다.

또 문정부 5년동안 부처이기주의로 공무원 17만명이 늘었는데 조직축소가 필요하고 산업부와 외교부 그리고 공공기관 등 각 부처간 비효율도 살펴봐야 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4월 15일(금)	4월 18일(월)	4월 19일(화)	4월 20일(수)	4월 21일(목)
미	달 러 (USD)	1224.20	1230.10	1232.80	1234.90	1237.10
일	본 엔 (JPY)	971.55	971.91	969.45	956.06	967.13
캐 나 다	달 러 (CAD)	970.74	975.07	977.68	979.22	990.39
홍 콩	달 러 (HKD)	156.09	156.83	157.19	157.46	157.71
위 안 화	(CNH)	192.02	192.79	193.24	193.45	192.58
유 로 화	(EUR)	1325.20	1330.66	1328.84	1332.33	1342.75
호 주	달 러 (AUD)	908.05	909.78	906.79	912.28	921.21
싱 가 폴	달 러 (SGD)	902.90	906.02	905.31	902.94	907.4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9.31	290.43	289.76	290.26	288.91

계산서 발행 대상 문의

- Q** 계산서 발행 대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회사 주관 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개인이 교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해당교육비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을 요청 받았는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것인지요?
 * 해당 개인은 차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자연인 개인입니다.
 만일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안되어 영수증으로 발행한다면 일반 간이 영수증으로 발행이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 한시적으로 개인주민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산서도 그러한지 자문요청드립니다.
- A**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발급하는 공급자가 사업자이면 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개인이라도 당연히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당사 홈페이지 개발 업무를 개인 프리랜서에게 의뢰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기타소득 처리 문의

- Q** 안녕하세요.
 당사 홈페이지 개발 업무를 개인 프리랜서에게 의뢰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필요경비는 60%로 설정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A** 개발업무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자에게 홈페이지 개발업무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 관련

Q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항목 중에 근속연수 중 제외 월수 부분이 있는데 제외 월수 작성 방법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적는다고 되어있는데 퇴직금 산정이라는 부분이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제외된 기간의 월수 인건지 아님 입사일로 퇴사일까지 해당하는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적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의미하며, 근속연수 제외월수는 근속연수기간 중 근속연수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문의

Q 법인사업장 공장 임대 중입니다. 임차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동산임대계약을 재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05/01 ~ 12/31까지 8개월로 계약 진행 완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위 같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수일자를 365일로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8 개월의 기간인 245일로 계산하는지요?

A 계약이 연장되어 1.1~12.31까지 부동산임대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당연히 12개월 전체의 기간동안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세법상 소득처분은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처분하게 되는데, 사내유보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며, 사외유출된 금액은 해당 귀속자의 과세 소득으로 납세의무를 지우게 된다.

이러한 소득처분에 있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고 있다.

대표자의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금액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는 그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하면 향후 대표자가 그 소득을 법인에 환원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바, 경감되거나 배제되지는 않는다(대법 85다사 1548, 88.11. 8).

물론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득의 귀속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불분명한 소득을 대표자에게 무조건 상여처분을 하는 이유는 법인의 모든 상황에 대해 최종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다고 보며, 또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소득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책임을 대표자에게 물음으로써 그 귀속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말하는데, 세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대표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표자가 아니란 객관적 증빙없는 한 등기부상 대표자를 말함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말한다. 즉,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법기통 67-106...19).

그러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즉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하더라도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 소득을 그 등기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대법 88누 3802, 89. 4. 11).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시는 각각 구분 귀속된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다.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 의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법기통 67-106...17).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54조).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직무를 행한 자를 대표자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개인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0%	0.60%	3%	0.60%	1.20%	6%
3억~6억원	0.70%	0.80%		0.90%	1.60%	
6억~12억원	1.00%	1.20%		1.30%	2.20%	
12억~50억원	1.40%	1.60%		1.80%	3.60%	
50억~94억원	2.00%	2.20%		2.50%	5.00%	
94억원 초과	2.70%	3.00%		3.20%	6.00%	



주요 예 · 적금 상품

구분	은행	상품	최고금리(+우대금리)
예금	NH농협은행	NH 더 행복한 동행 예금	연 2.05%
예금	SH수협은행	Sh골든리치이벤트정기예금(4차)	연 2.25%
적금	신한은행	안녕 반가워 적금	연 4.4%
적금	KB국민은행	KB마이핏적금	연 3.5%
적금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차 플러스 정기적금	연 8%



기업이 원하는 새정부 산업기술혁신정책 실행과제

과제명	과제 내용
R&D혁신성 위주의 R&D세액공제	R&D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기업에 10% 이상 추가 세액공제 제공
민간 R&D지원 전담조직	(가칭)과학기술위원회에 민간R&D지원국 설치 및 R&D협의체 역할 강화
국회 기업혁신 옴부즈만제 신설	정부부처 간 경계를 넘어 기업R&D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옴부즈만제 운영
모든 중기 연구소에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	PMS, 연구노트 등 전면 보급하여 R&D효율성 제고와 R&D사업관리 부담 완화
대·중소 협력 R&D 파격 세제 지원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R&D를 하는 경우 20% 이상 세액공제
기업 R&D원스톱서비스 구축	협력파트너, 기술, 시장, 특허분석 등 R&D 관련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정부 기후위기대책기구에 산업계 1/3이상 참여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탄소총립, 즈기후변화 논의 시 기업이 핵심적 역할
재직자 대상 디지털변화 기술연수사업 확대	중견·중소기업의 DT를 이끌어 나갈 재직인력에 온/오프라인 교육 확대
산업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 추진	기업이 믿고 산업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시스템 구축
기술혁신기업의 기술축적 지원하는 상속세 감면	R&D역량 우수 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가업승계 보장
서플라이체인 내 대·중소기업 DT 협력 지원	대·중소기업 DT협업펀드 조성, 대·중소협력 디지털코칭 프로그램 등
40만 기업연구원 위한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	기업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가기념일 제정 및 훈포장 확대
해외 디지털인력 유치 위한 특별비자 K-PASS 도입	디지털 관련 외국인 전문인력의 체류조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 등 정비



경력을 키우는 7가지 방법

1. 부업을 하십시오.

작은 온라인 샵을 만들거나, 블로그 운영이나, 포트폴리오에 더 많은 가치를 추가하는 것은 모두 부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직업윤리가 더 좋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이전에 경력에서 사용하지 않은 더 많은 기술을 추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읽거나 시청하십시오.

같은 분야의 성공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블로그, 잡지, 강연, 전자책 등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경력과 기술을 사용하여 현재 위치에 도달했는지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3. 의사소통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의사소통 기술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말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메시지는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분야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도전하십시오.

인터넷에서 배울 수 있는 플랫폼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평범하고 반복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5. 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과정을 수강하십시오.

특정 기술의 인증을 받기 위해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인증받으면 당신이 경력에 대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6. 중, 장기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5년 후 또는 10년 후 어떤 모습인지 그려 보신 적 있으시가요? 습득해야 할 기술들을 당신의 플래너에 적으십시오. 그 기술 습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를 구성하여 단계별로 tasks를 적어 두십시오.

7.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십시오.

기술을 향상하려면 안내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분야에서 더 훌륭하고 실용적이 되기 위해 매일 단 1시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회사 내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업을 찾고 있다면 오랫동안 꿈꿔 왔던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령법인-1202, 2021.09.17

■ 질 의

- (질의1)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질의2) 질의에서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기부할 때 쟁점사업비가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이하 '쟁점건물')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쟁점건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건물 공사비 중 일부(이하 '쟁점사업비')를 부담하며, 잔여 사업비는 A법인이 부담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그 즉시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면서 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경우, 쟁점사업비는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물 준공 후 지자체 및 교육청에 기부채납했을 때의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4017, 2021.07.21

■ 질 의

- '21.7월부터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KRX) 상장 미국달러선물을 독일 유렉스(EUREX) 연계 야간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를 할 예정임

질의내용

- EUREX 연계 야간시장에서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할 경우 국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인-4611, 2021.08.13

■ 질 의

- 질의법인 '19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 액공제 신청
 - '20년에 '19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21.3.16.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9년에 공제 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음

- '20년 대비 '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내용

- '20년 상시근로자 수가 '19년 상시근로자수 보다 감소하였으나 '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할 경우 '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갑설) '21년에 증가한 근로자 수 계산 시 '20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
 - (을설) '21년에 증가한 근로자 수 계산 시 '19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

- * '19년 대비 '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21.3.1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9년에 공제 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 하지 않으므로 '19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2021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20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

서면법령법인-4319, 2021.09.16

■ 질 의

- A법인은 '08.12월 상호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월 합병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소멸되었으며
 - 합병법인은 '20.5월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해당 물적분할은 비적격분할*에 해당함
 - * (지분의 연속성 미비)'20.9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전부를 처분

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을 판단할 때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이「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납기연장 추진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또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으며, 금리상승기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오전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20일 특위 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를 열어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2차보전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영세사업자가 취업·재창업하면 가산세 면제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은 분할납부하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하려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자로서 신청일 기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세금이 총 5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가산금, 가산세는 제외).

또한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8~2019년 사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탈세혐의로 처벌받은 내역이 없고, 신청일 기준 조세범칙사건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

징수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국세청 측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체납자가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추경 50→30조원 하향조정... 소상공인 패키지 다음주 발표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이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14차 회의(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 손실보상법 등 지난해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금 지원은 국고부담이 크지만 즉효성 약으로 생명유지를 시켜주는 방안이다.

금융(배드뱅크), 세금공과금 등 유예감면은 당장 국고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한시적으로 위험을 미래로 미루는 마취약일 뿐 위험은 계속 쌓인다.

즉효성 정책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마취성 정책은 위기가 곧 끝날 것이 유력한 경우 사용한다.

인수위가 집중하는 부분은 '맞춤형 지원'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줄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좀 더 세밀하게 골라내겠다는 뜻이다.

현금지원 관련 윤 당선인은 최대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초 방역지원금을 받은 32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19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직접 손실 규모 추산을 위한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 하한액을 현 50만원보다 올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 국세청, 2022. 4

-
- (발간배경)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 (구성내용)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① 사실관계 ② 질의내용 ③ 답변내용 ④ 관련 해석 ⑤ 참고자료 순으로
 - ▶ 사례별로 그림, 도표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아울러,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하여 국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 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 선택
 - ▶ 아울러,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발간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 이에,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쉽게 풀어서 작성하였습니다.

2 주요 구성내용

-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민들이 양도소득세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 국민들이 자주 묻는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② 다주택자 중과제도 ③ 조합원입주권·분양권 ④ 장기임대주택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위주로 매월 제작하며,
 - ▶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 구성은 ①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 질의내용 ③ 국세청의 답변내용 ④ 관련 해석 ⑤ 비과세 판정흐름도 등 참고자료 순으로 하여
 - ▶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특히,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형별 판정흐름도를 추가하고
 - ▶ 안내한 사례와 동일·유사한 상황에서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함께 수록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3 이용방법

- 국세청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의 별도 코너를 통해 매월 안내할 예정이며, 접근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4 향후계획

-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 ▷ 지난해 주택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주택과 세금(’21년 3월)」 책자를 발간하고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21년 6월)」을 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
- 올해에도 이러한 납세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제작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 ▷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 아울러,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주택과 세금」책자는 개정세법을 반영하는 등 더욱 알차고 새롭게 구성하여 「2022 주택과 세금」으로 3월 중 다시 발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가산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 ◎ 2주택(A,B)을 보유한 김국세씨는 '21.4월 B주택을 양도(과세)한 후 '23.6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Q. 2주택 이상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던데,
 - 제 경우 A주택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이 없었으나, 보유기간 재가산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이 새로 필요한가요?
- A. '17.8.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 귀하의 사례와 같이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었으므로 보유기간이 재가산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석사례 1. 서면-2021-법규재산-3490(2022.02.23.)**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2021.06.29.)

’ 17.8.2. 이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21.01.14.)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 동 사례는 해당 주택이 취득당시 ‘거주요건’이 있었던 경우임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12억)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 부산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22.6월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양도가액 : 15억원, 취득가액 : 5억원, 필요경비 : 5천만원, 보유·거주기간 : 12년

Q. ’ 21.12.8.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던데,

－ 제 경우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면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고가주택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 21.12.8.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 귀하의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4,245,000원*입니다.

■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12.7. 이전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text{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양도차익} = \text{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times \frac{\text{양도가액} - 12\text{억원}}{\text{양도가액}}$$

$$\text{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text{양도자산 전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times \frac{\text{양도가액} - 12\text{억원}}{\text{양도가액}}$$

3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12억)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 '22.5월 이천절씨는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을 15억원에 양도할 예정임

Q. ' 22.1.1. 이후부터는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던데

- 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분 양도차익과 과세되는 상가분 양도차익은 각각 어떻게 계산하나요?

A. ' 22.1.1. 이후 고가 겸용주택(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부분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따라서, 귀하는 경우 첨부된 계산사례와 같이 상가분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27,345,000 원이며, 주택분 양도차익은 비과세 됩니다.

* 고가 겸용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는 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고가 겸용주택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종 전	개정('22.1.1. 이후)
실제거래가액 12억 이하	1. 주택 연면적 ≤ 주택의 부분 연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2. 주택 연면적 > 주택의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1, 2 (좌 동)
12억 초과	1. 주택 연면적 ≤ 주택의 부분 연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2. 주택 연면적 > 주택의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1, 2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4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 아버지와 동일세대로 함께 거주하던 이민국씨는 '21.7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음

－ 이민국씨는 ' 22.12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고 하던데,

－ 제 경우는 주택을 상속받아 제 명의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나

－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0661(2011.07.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해석사례 2. 부동산거래관리과-1345(2020.11.09.)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5조에 따른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같은 법 제1073조 및 제1074조에 따른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부동산거래관리과-0857(2011.10.12.)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5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이국세씨는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노후화되어 주택을 '20.7월 멸실하고 '21.5월 신축·취득함

－ 이국세씨는 ' 22.12월 신축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주택이 노후화되어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인가요? 아니면 신축주택의 취득일인가요?

A. 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 89.7월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 22.12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0160(2012.03.15.)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 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2015.11.25.)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6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 농가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김대한씨는 농가주택과 서울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향후 서울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농가주택이 오래되고 너무 낡아 멸실한 후 서울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농가주택을 멸실하고 서울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2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농가주택을 멸실한 후 서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대상 아님

해석사례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3(2007.02.23.)

2주택을 소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2021.02.08.)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 §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해석사례 3. 재산세과-1598(2009.07.31.)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7

자녀가 다른 도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 고 이사가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이천절씨 가족은 '21.2월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자녀가 대전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대전으로 이사함에 따라 서울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해야 한다고 하던데,

- 제 경우에는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이 1년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녀의 취학으로 부득이하게 이사함에 따라 집을 파는데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A. '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 자녀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6(2007.12.21.)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부동산거래관리과-486(2012.09.1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15-부동산-2254(2015.12.01.)

국내에 2년 미만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 라고 함)로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8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조정대상지

역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이성실씨 가족은 서울 소재 1주택(A)을 보유하던 중 배우자가 '16.3월 세종시로 직장을 이전함

- 이성실씨는 ' 22.2월 서울 소재 주택(B)을 취득 후 ' 22.3월 종전주택(A)을 양도하고, 신규주택 (B)으로 이사하였으나 배우자는 근무상의 이유로 신규주택(B)에 전입하지 못함.

Q.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 해야 한다고 하던데,

- 배우자가 직장 문제로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A. ' 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다만,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인해 신규주택의 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그 주택에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 나머지 세대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소규칙§71③)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해석사례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2005.06.01.)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석사례 2.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2021.07.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9

세대전원이 출국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김국세씨는 '21.5월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해외에 소재한 외국 회사에 취업하여, 세대전원이 '22.1월 출국하고 '22.5월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세대 전원의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1. 재산세과-21(2009.08.25.)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일(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재산세과-862(2009.11.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의 취학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의 취학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해석사례 3. 부동산거래관리과-265(2010.02.1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0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6개월 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김성실씨는 '13.9월부터 세대전원이 임차하여 살고 있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21.11월 분양 전환하여 취득함

－ 김성실씨는 분양전환한 주택을 ' 22.4월 양도할 예정임

Q.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거주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 제 경우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거주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해당 임대주택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 22.2.15.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22.2.15.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임대주택 범위에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외 공공매입임대 주택을 추가함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179(2012.04.0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입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17-부동산-1460(2017.08.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부동산납세과-2(2015.01.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를 개시한 이후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세대를 합가한 다음 최초 임차인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임차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022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 국세청, 2022. 4

I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매월(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다음 해 2월 소득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상시고용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종교단체는 반기별납부 신청 가능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과세소득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비과세소득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 등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사실상 동일)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 공제	<table><tr><th>종교인이 받은 금액</th><th>필요경비</th></tr><tr><td>2천만원 이하</td><td>80%</td></tr><tr><td>2천만원 초과</td><td>1,600만원 +</td></tr><tr><td>4천만원 이하</td><td>2천만원 초과액의 50%</td></tr><tr><td>4천만원 초과</td><td>2,600만원 +</td></tr><tr><td>6천만원 이하</td><td>4천만원 초과액의 30%</td></tr><tr><td>6천만원 초과</td><td>3,200만원 +</td></tr><tr><td></td><td>6천만원 초과액의 20%</td></tr></table> <p>예) 수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900만원 필요경비 인정</p>	종교인이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80%	2천만원 초과	1,600만원 +	4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액의 50%	4천만원 초과	2,600만원 +	6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	<table><tr><th>총급여액</th><th>근로소득공제금액</th></tr><tr><td>500만원 이하</td><td>총급여액의 70%</td></tr><tr><td>500만원 초과</td><td>350만원 + 500만원</td></tr><tr><td>1,500만원 이하</td><td>초과액의 40%</td></tr><tr><td>1,500만원 초과</td><td>750만원 + 1,500만</td></tr><tr><td>4,500만원 이하</td><td>원 초과액의 15%</td></tr><tr><td>4,500만원 초과</td><td>1,200만원 + 4,500</td></tr><tr><td>1억원 이하</td><td>만원 초과액의 5%</td></tr><tr><td>1억원 초과</td><td>1,475만원 + 1억원</td></tr><tr><td></td><td>초과액의 2%</td></tr></table> <p>예) 총급여액 5,000만원인 경우 1,225만원 소득공제</p>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350만원 + 500만원	1,500만원 이하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750만원 + 1,500만	4,500만원 이하	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200만원 + 4,500	1억원 이하	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종교인이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80%																																					
2천만원 초과	1,600만원 +																																					
4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액의 50%																																					
4천만원 초과	2,600만원 +																																					
6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350만원 + 500만원																																					
1,500만원 이하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750만원 + 1,500만																																					
4,500만원 이하	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200만원 + 4,500																																					
1억원 이하	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개인연금저축	(좌 동)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7만원)	(좌동, 표준공제는 13만원)+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능	수급 가능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II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①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② 필요경비			필요경비 (20~80%)	근로소득공제 (2~70%)
③ 소득금액(①-②)				
④ 소득공제	인적	기본(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인당 150만원)	○	○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특별	건강·고용보험료(전액)	×	○
		주택자금(300~1,800만원 한도)	×	○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장기펀드 저축액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⑤ 과세표준(③－④)				
⑥ (×) 세율(6~45%)				
⑦ 산출세액(⑤×⑥)				
⑧세액공제	근로소득(50만원~74만원 한도)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	○
	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	○
	연금계좌(12%,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한도), 50세 이상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한도))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추가납입 허용		○	○
	특별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	○
		의료비(15%, 700만원 한도)	×	○
		교육비(15%, 300만원(대학 900만원) 한도)	×	○
		기부금(금액별 20%, 35%)	○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 소득·세액공제 미신청자)		○(7만원)	○(13만원)
조특법	정치자금기부금 등(금액별 100/110, 15%, 25%)	○	○	
⑨ 결정세액(⑦－⑧)				
⑩ 기납부세액				
⑪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⑨－⑩)				

III

종교인소득 관련 법령 규정

구분	내용	법령
과세대상	종교인소득의 범위 및 기타소득 과세 -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소법§21①26호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 신고 허용	소법§21④
	종교단체의 범위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그 소속 단체를 포함)	소령§41⑤

	종교관련종사자의 범위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	소법§12 5호 아목
	비과세 대상의 세부기준	
	-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적 비용(종교활동비 등), 자녀보육 수당, 사택제공이익	
과세체계	종교인소득의 기타소득 필요경비계산 - 2천만원 이하 80%, 지급액 증가에 따라 비율 감소(~20%)	소령§87 3호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 예외 - 원천징수되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소법§73①,②
	종교단체의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 -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소령§186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소령§202④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연말정산 - 다음연도 2월 소득 지급 시(미지급시 2월말)	소법§145의3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연말정산 방법 -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세액공제하여 소득세 산출	소령§202의4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예외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종교인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법§155의6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소법§164①
기타	종교단체의 구분기장에 대한 규정 -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비과세 금품도 포함)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	소령§41⑯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 종교단체가 종교인회계와 종교단체 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문·조사하는 때에 종교단체 회계에 대하여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음	소법§170 소령§222
서식 (14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1호),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23호서식(6)),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25호의3), 종교인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37호) 등	소칙(별지서식)



IV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종교단체)

-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매월 종교인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 (매월납부 원칙)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
- (반기별 납부 선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는 편리하게 1년에 2회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신청기간	소득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22.6.1. ~ 6.30.	'22년 7월 ~ 12월	'23년 1월 10일
'22.12.1. ~ 12.31.	'23년 1월 ~ 6월	'23년 7월 10일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찾기에서 '반기별' 입력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 우편·방문 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V 신고서식 및 제출시기

구분	종류	서식	제출시기	비 고
원천징수	월별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자별원천징수부(종교단체에 비치) 	다음 달 10일	매월 제출
	반기별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자별원천징수부(종교단체에 비치) 	6월, 12월 7월10일, 1월10일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연말정산	연말정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신청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12월 31일 다음해 2월까지	
	연말정산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포기신청서 	12월 31일	
지급 명세서*	연말정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	선택 가능
	연말정산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미실시	•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다음해 5월 말일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다음해 5월 말일	

* 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②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적용, ③ 금융거래시 제출 요청 등을 위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 '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 (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지연 제출시 0.5%)
 - * (유예) '18.1.1.부터 '19.12.31.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 제외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10조의2)

VI 신고서식 및 제출시기

아래 내용은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4대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실무 적용시에는 해당 부처(보건복지부 등)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교단체(종교인)의 사회보험 적용 여부

구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종교단체(종교인)	여	여	부	부

* 건강보험 : 종교단체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적용이 가능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 적용이 가능

1. 건강보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함
 -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월별, 반기별)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에 해당
 - 단, 소속 종교인 또는 행정직원이 없는 1인 종교단체의 대표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

2. 국민연금(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사업장가입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음



- 단,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에도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합의하여 사업장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 적용이 가능

3. 고용보험(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종교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대상 아님
- * 근로자는 사업주에의 전속성,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4. 산재보험(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종교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대상 아님

VII

올해 달라지는 사항

구분	종류	주요 변경 내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액 공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전) 2020. 12. 31. - (개정후) 2022. 12. 31.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추가 납입 허용 및 한도 추가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전) 1천만원 이하 15% 공제, 1천만원 초과분 30% 공제 - (개정후) 1천만원 이하 20% 공제, 1천만원 초과분 35% 공제 * '21.1.1. ~ '21.12.31.기부분에 한해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42% - (개정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45%
근로장려금	연간총소득 기준금액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VIII

종교인과세 질의·응답(Q&A) 사례

01. 과세대상소득

Question	Answer
Q1. 종교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 - 다만,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받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Q2. 소속된 종교단체 이외의 타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Q3. 종교단체가 아닌 교인들로부터 종교인이 사례비를 받은 경우 과세 방법은?	
Q4. 교인들에게 월 30만원 정도의 파트타임(주1회 반주자, 방송실 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액이 과세 대상인지?	
Q5.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가 신도들에게 받는 기부금(헌금 및 시주 등)은 세금이 과세되는지?	헌금, 시주 등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종교인이 직접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킨 후, - 종교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함 ※ 단, 종교단체에 귀속된 후 종교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Q6. 신자가 종교단체에 기부할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되는지?	
Q7. 사찰의 보시함에 명목을 기재하지 않고 놓고 가는 시주금이나 상담 후 놓고 가는 금전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Q8. 개척교회, 말사 등 소규모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의 가족이 종교단체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Q9. 총회에서 개척교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과세 대상인지?	
Q10. 교회 목사의 부인이 직함을 가지고 사례비를 받으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 부인이 종교인에 해당하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며, 종교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함



Q11.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개인부담분을 종교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해준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 하는지?	종교인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종교단체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Q12. 종교인에게 지급한 김장지원금, 이사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금도 과세대상인지?	
Q13.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이 종교단체의 특정 행사일에 일시적으로 근무한 경우, 일회성 수고비 성격의 지급액도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일반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 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예: 사례금, 인적용역 제공 대가) 등으로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함
Q14. 신학대 교수의 경우 의무적으로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협동목사를 겸하게 되는데, 신학대 교수인 협동목사가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는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인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02. 비과세소득

Question	Answer
Q15. 교회에서 목회자의 자녀 교육비 등을 교회 회계에서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로 분류가 가능한지?	자녀교육비, 사회보험료(개인 부담분) 등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교활동비로 분류할 수 없음
Q16. 종교단체 의결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자녀학자금 등을 종교단체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div>종교활동비 비과세 요건</div> <div>㉠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div> <div>㉡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div> <div>㉢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함</div>
Q17. 휴대폰 요금 등 종교활동과 관련되어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종교단체가 휴대폰을 구입하여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요금을 종교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종교인 소득 과세와 무관함

Q18.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노트북을 제공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종교단체가 노트북, 참고도서 등을 구입하여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등재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함
Q19. 목회를 위한 참고도서 구입을 위하여 성직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도서구입비에 대하여도 과세가 되는지?	
Q20.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종교활동비의 정의, 결정, 사용처, 관리, 증빙 등에 관한 기준을 교회(종교단체)의 정관이나 재정규칙 등에서 정하여야 한다는 뜻임 - 또한, 그러한 정관이나 재정규칙은 반드시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Q21.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①본인학자금, ②식사 또는 식사대(월 10만원 이내), ③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종교활동비 포함), ④월 1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비, ⑤사택제공이익이 있음 ※ 근거 법률 :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Q22. 비과세되는 본인학자금의 한도액은?	실제로 납부하는 수업료 등을 한도로 함
Q23.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 금액을 종교단체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 문제가 없는지?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이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고, 일부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종교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일부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교인 소득에 해당함
Q24. 종교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은 종교인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말하므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은 비과세소득이 아님
Q25. 소속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은 비과세 소득인지?	종교인에게 소속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Q26.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식비로 매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경우 얼마까지가 비과세 소득인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식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소득임
Q27. 종교인이 사용한 출장비, 여비는 아무런 제한없이 모두 비과세소득인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만 비과세됨 - 어느 정도가 실비변상적인지는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절차, 즉 종교단체 내부 규정이나 절차에 따름



<p>Q28. 출산·보육비 비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p>	<p>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 중 만 6세를 초과해도 그 과세기간 말일까지는 비과세함 - 자녀의 수와는 상관없이 없음(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이든 2명 이상이든 월 10만원만 비과세함)
<p>Q29. 개척교회는 목사의 자가용을 교회관련 업무에 사용하고 유류비 형태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데, 월 20만원 까지만 비과세에 해당하는지?</p>	<p>종교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이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을 교회의 명의로 등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유류비 등 지출액은 종교인소득과 무관한 종교단체 회계에 해당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비과세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 ㉡ 종교활동에 이용 ㉢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div>
<p>Q30.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종교단체에서 지출한 사택관리 비용도 비과세되는지?</p>	<p>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만 비과세 대상임</p>
<p>Q31. 종교인 명의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를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보조받거나, 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에 해당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
<p>Q32. A교회는 담임목사의 원룸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고 있음(월 70만원, 담임목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소속 종교단체 규약에 숙소 임차료를 교회에서 지급한다고 명시)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서 규정하는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교활동비에 해당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한 임차료를 종교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종교단체 내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임 - 아울러, 사택에 거주하는 종교인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종교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임

03. 종교단체

Question	Answer
Q33. 종교인소득 과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종교단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를 말함
Q34. 소득세법상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교단체에 해당함
Q35. 종단(교단)에서 고유번호증을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는데, 개인으로 보는 단체(***-89-*****)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82-*****)의 차이가 있는지?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으나, 지출경비 구분 및 관리(단체명의 신용카드 및 통장) 등의 측면에서 법인으로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음
Q36.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한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데, 종교인소득 과세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님

04. 구분기장/장부작성

Question	Answer
Q37.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소득 회계를 구분 기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종교단체의 지출 중 ①종교단체 고유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②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 즉,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장부(통장)와 종교단체 고유의 종교활동 비용에 대한 장부(통장)를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라는 의미임
Q38. 종교단체 구분 기장이 세법상의 의무사항인지(미이행시 제재 등)?	미이행시 제재는 없으나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분 기장하는 것이 편리함
Q39. 종교단체 구분 기장과 관련하여 종교인 명의와 종교단체 명의로 된 통장을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지?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종교단체 회계를 구분·관리하는데 효율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가운데가 82)을 부여받으면 종교단체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Q40. 미자립교회나 말사 등의 소규모 종교단체의 경우 장부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종교단체 규모와 상관없이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종교인회계) 등과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종교단체회계)을 구분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함
Q41. 지출증빙자료를 비치·보관하라고 하는데 사찰의 경우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p>법정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제재는 없지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 농·어민과의 직거래 등은 계좌 이체를 통해 관련 증빙을 보관하거나,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장부에 기록·관리하면 됨

05. 원천징수/종합소득세

Question	Answer
Q42.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과 일반직원들에게 사례비 또는 보수를 지급할 때 법 소정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한 후 이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함
Q43.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함
Q44. 미자립교회의 경우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없는데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전혀 없는 경우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의무는 없음 다만, 종교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Q45. 원천세 신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기쉽게 따라할 수 있는 원천세 신고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
Q46. 월별 또는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요령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교인소득 → 참고자료실 → 종교인소득 원천세 신고방법) 참조</p> </div>

Q47.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원천징수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원천징수할 경우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음
Q48. 소수의 종교인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다음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Q49.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경우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하였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종교단체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종교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Q50. 하나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인별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를 달리하여 선택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은 종교단체에서도 종교인별로 소득의 종류를 달리하여 선택할 수 있음
Q51. 종교인소득에 대해 매달 또는 매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를 달리 선택할 수 있는지?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Q52. 원천징수하지 않은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Q53.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당초 원천징수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Q54.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2019.1.1. 지급분부터 70% ⇒ 60%로 변경되었는데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도 변경되었는지?	변경된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등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으로 종교인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소득은 당초와 같이 지급받는 금액에 따라 20-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됨



Q50. 하나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인별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를 달리하여 선택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은 종교단체에서도 종교인별로 소득의 종류를 달리하여 선택할 수 있음
Q51. 종교인소득에 대해 매달 또는 매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를 달리 선택할 수 있는지?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Q52. 원천징수하지 않은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Q53.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당초 원천징수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Q54.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2019.1.1. 지급분부터 70% ⇒ 60%로 변경되었는데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도 변경되었는지?	변경된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등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으로 종교인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소득은 당초와 같이 지급받는 금액에 따라 20-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됨
Q55. 올해 1,2월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 및 원천세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지?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 - 다만,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Q56.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할 세액이 있음에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원천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 아울러,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음
Q57. 금년 1월에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았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됨 - 귀속연월은 '22.1월, 지급연월은 '22.6월, 신고연월은 '22.7월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면 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교인소득 → 참고자료실 → 종교인소득 원천세 신고방법) 참조</div>

Q58. 종교인소득 신고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한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Q59.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p>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율이 다르고, 공제항목도 달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종교인소득(기타/근로) 예상세액 비교 (’19.5월 개통) : 홈택스 → 우측의 「모의 계산」 → 근로·종교인소득(기타소득) 세액 비교</p> </div>
Q60.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시 원천징수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월지급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양가족 수를 적용하여 종교인소득(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함
Q61. 원천징수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소액이라서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0” 원인 경우에도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p>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함</p> <p>- 다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는 편리하게 1년에 2회(7월, 1월)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음</p>
Q62.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후 무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종교단체가 ’18.1.1.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
Q63. 종교인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합산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는?	종교인은 종교인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Q64.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p>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2개 이상의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연말정산시 합산 신고 하지 않은 경우 </div>



	3.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이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타 소득이 있는 경우
Q65.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도퇴사자의 퇴사시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어디에 기재하는지?	기타소득의 경우 중도퇴사자란이 별도로 없으므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해당월의 A44 연말정산 란에 기재해서 신고해야 함

06. 연말정산/지급명세서

Question	Answer
Q66.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는 것으로, 연말에 실제 소득을 정산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부족하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임
Q67.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였는데,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여부는 종교단체에서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연말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31.)까지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Q68. 연말정산을 모든 종교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과세표준 계산과 각종 공제항목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가 동일함
Q69. 종교인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한 경우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지?	알기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안내를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교인소득 코너에 게재하였음
Q70.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교인소득 → 참고자료실 → 종교인소득 원천세 신고방법과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참조
Q71.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된 자료는 없는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하고, 연간 소득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됨
Q72. 종교단체가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Q73.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p>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세액공제의 차이가 있음</p> <table><tr><th>구분</th><th>공통으로 인정</th><th>근로소득만 추가인정</th></tr><tr><td>소득공제</td><td>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 창업투자조합출자공제</td><td>특별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장기펀드저축액</td></tr><tr><td>세액공제</td><td>표준공제, 자녀, 기부금, 외국납부, 연금계좌</td><td>근로소득, 월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td></tr></table> <p>* 표준세액공제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 7만원, 근로소득은 연 13만원</p> <p>* 종교인소득은 필요경비(20~80%)를 적용하고 근로소득은(2~70%)를 적용</p>	구분	공통으로 인정	근로소득만 추가인정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 창업투자조합출자공제	특별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장기펀드저축액	세액공제	표준공제, 자녀, 기부금, 외국납부, 연금계좌	근로소득, 월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구분	공통으로 인정	근로소득만 추가인정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 창업투자조합출자공제	특별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장기펀드저축액									
세액공제	표준공제, 자녀, 기부금, 외국납부, 연금계좌	근로소득, 월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Q74. 종교인소득의 소득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공제항목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공제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적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음										
Q75.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음										
Q76. 어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소득의 종류(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실시 여부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에 유의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기타(종교인) 소득</th><th rowspan="2">근로소득</th></tr><tr><th>연말정산을 한 경우</th><th>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th></tr><tr><td>지급명세서 서식</td><td>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td><td>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td><td>근로소득 지급명세서</td></tr></table>		구분	기타(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서식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구분	기타(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서식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Q77. 종교활동비의 경우 해당 항목별 세부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는지?	항목별 명세는 제출하지 않으며,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 종교활동비의 총액만 기재하여 제출										



Q78.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p>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과 관련한 신고의무는 없음</p> <p>- 다만, 종교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p>
Q79. 종교단체가 원천세를 신고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p>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p>
Q80.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어느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p>기타소득으로 선택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의 ⑦, ② 1 “비과세소득”란에 기재</p> <p>- 기타소득으로 선택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의 ⑮ “비과세소득”란에 기재</p> <p>- 근로소득으로 선택할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에 “18-③ 0 종교활동비”라 기재한 후 우측에 금액을 기재함</p>
Q81. 종교단체에서 매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종교단체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p>매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종교인이 개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p> <p>단, 매월 원천세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연말정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p>
Q82. 지급명세서 제출시 종교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p>① '19년부터 지급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명세서(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를 제출하고, 가구·소득·재산 등 법적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p> <p>②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p> <p>③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에서 지급명세서를 첨부 요청 등</p>
Q83.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경우 기타소득과 같이 연말정산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p>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 지급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용)’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 근로소득으로 선택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함
Q84.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하는 항목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또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의 “비과세소득”란에는 종교활동비만 기재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비과세소득”란에는 학자금, 출산육아비, 종교활동비 등을 기재함
Q85.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게 제출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20.1.1. 이후 발생 지급분부터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게 제출된 경우 지급금액의 1% (지연 제출시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07. 퇴직소득/4대보험

Question	Answer
Q86. 종교인이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하면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도 과세대상인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임
Q87.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일(’18.1.1.) 이전 적립된 퇴직금을 과세 시행 이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18.1.1. 이후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함
Q88. 종교인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및 혜택대상이 되는지?	<p>4대 보험은 해당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세청에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실무 적용시에는 아래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문의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산재보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div>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고용노동부, 2022. 4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14.(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알렸다.
 - 이어서 열리는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 선정, 자산운용계획·지침 작성, 표준계약서 제·개정, 수수료 수준 등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 * 퇴직연금 도입률: 30명 미만 24.0%, 30-299명 77.9%, 300인 이상 90.8%
 -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하고,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하여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 재정지원
 -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에 공시한다.
 - 이번 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하여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